

[미디어연대 생방송 현안토론회]



반일여론과 한국의 경제 · 외교

일시 | 2019.8.27(화) 오전10시

장소 |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

주최 |  

후원 | 펜앤드마이크

본 토론회는 '펜앤드마이크' 후원으로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 ————— 순 서 ————— ■

■ 사 회

- 정 규 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 기 조 발 제

- 정 규 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 발 제

- 류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이 영 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 종 합 토 론

■ 폐 회



■ 목 차 ■

■ 발 제

- 반일 여론과 민족주의, 실체와 정립의 방향은? 9
- 류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반일 여론과 한일 경제 대결의 실상과 대안 22
-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반일 민족주의와 한국의 안보 위기 29
- 이 영 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책토론회

발 제

- 류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이 영 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권의 관제 민족주의 = 반일 종족주의 ≠ 개방형 민족주의

류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식민사관’ vs 한국의 발전

우리 역사에 대한 ‘내재적 발전론’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로 탄생했다. 일본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조선은 내부적으로 ‘근대’ 즉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정체’된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즉 일본에 의한 타율적 견인만이 조선을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식민사관’에 대항해 우리 국사학계는 조선도 자체적인 역사발전의 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노력했다. 조선후기 사회가 내부적인 다시 말해 자생적인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강조된 개념이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맹아’다. 맹아의 실체로는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경영형 부농’ 혹은 정치사상적 차원의 ‘실학’이 강조되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그것이 부농의 등장을 강조한 유물론이건 혹은 실학의 등장을 강조한 유심론이건 동일한 논리를 전개했다. 조선은 자생적으로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완성되기 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여 자생적인 역사발전의 씨앗을 짓밟았다는 논리다.

이와 같이 등장한 ‘민족사관’은 해방과 건국을 거쳐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 학계의 지배적인 사관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조선후기농업사를 전공한 연세대 김용섭 교수의 연구가 이를 선도했고, 서울대 안병직 그리고 고려대 강만길 등 지금은 국사학계의 원로가 된 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해 결국 현재 국사학계 교수들 90 % 이상이 이 사관을 따르게 됐다.

민족사관은 1980년대 이른바 386세대의 학생운동도 뒷받침했다. 일본이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생적 자본주의 맹아는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매

판'적이고 '종속'적인 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해석이 '사회구성체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국사학계는 물론 사회과학 전체를 휩쓸었다.

매판적 부르주아가 외세 즉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국가권력과 결탁해 독점자본을 살찌우고 민중을 수탈하기 때문에 '혁명'이 필요하다는 운동권의 논리는 '민족사관'과 삼 쌍둥이였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 권력 곳곳에 포진해 있는 운동권 집단의 뇌를 채운 이 역사관은 노동, 언론, 학교, 법조, 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파리를 틀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586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자본주의는 정말 '독점을 강화'하고 '종속을 심화'시켜 결국 '민중을 수탈'하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중을 수탈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양산'했다. 노동자 농민을 도시빈민으로 내몰기는커녕, '마이카' 그리고 '마이홈'을 누리는 중산층으로 성장시켰다. 요즘은 이들과 이들의 가족이 명절이면 해외여행을 즐기기 위해 인천공항을 메우고 있다.

1960년대 경공업에 종사하던 여공들은 시골에 있는 부모의 어려운 생활을 돕고 또 형제들이 교육을 받아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며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더불어 탄생한 수백만의 남성 숙련기능공들도 열심히 일한 결과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역대 연봉을 받는 노동자로 변신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힘을 이용해 고용을 세습하는 '갑질'도 마다하지 않는 '노동귀족'이 되었다.

World Bank (1993) 가 인정하듯이 한국 자본주의의 기적은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공평한 분배도 이뤘다는 사실에 있다. 적어도 1997년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쾌거를 이뤘다. 흠수저 청년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의 사다리를 타고 얼마든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 포인트다. 민족주의 사관이 재단한 역사와 실제 진행되었던 역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완전히 어긋난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

우선,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자생적 맹아가 식민지를 거치며 짓밟혔다면 그 맹아는 언제 다시 우리 내부에 등장하여 한국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 해방과 건국 그리고 전쟁의 와중인 50년대에 자생적 맹아가 등장할 수 없었다면, 경

공업이 발전하던 60년대 혹은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던 70년대에 자생적 맹아가 등장한 것인가? 이승만 시대 그리고 박정희 시대를 각각 미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종속이 시작된 시기로 보는 민족주의 사관으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다.

다음, 식민지가 끝나고 어떻게든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자생적 맹아가 등장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과연 그 맹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라는 크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씨앗의 상태에서부터 성숙한 나무로 자라는 과정에 관한 설명도 민족주의 사관이나 운동권의 논리에서는 공백으로 남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997년 찾아온 경제위기를 자신들의 이론적 입장을 완성시켜주는 구세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자본주의가 몰락해야만 스스로의 논리적 완결성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1997년 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또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일인당 3만 불이 넘는 소득을 누리고 있다.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역사의 실체다.

역사발전은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외재적이다.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설파한 신채호의 말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되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반드시 내부를 향해 혹은 외부로 향해 일방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이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물론 그 상호작용의 결과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행히 우리 현대사는 이 상호작용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했음을 너무도 생생히 보여준다. 반면, 외부로의 문을 닫은 북한의 내재적 발전은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내재적 발전론은 외재적 발전론인 식민사관 만큼이나 일방적인 사관이다.

조선후기 맹아와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경제발전은 민족주의 사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맹아가 짓밟히고 왜곡되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나? 이 대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바꾼 역사학자가 안병직 교수다. 이른바 중진자본주의론을 제시하며 맹아론에 기초한 종속과 수탈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병직 교수 그룹의 에이스 이영훈 교수의 대안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에 등장해서 토지를 집적했다는 이른바 ‘경영형 부농’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당시의 전반적인 경향은 토지소유가 잘게 쪼개지는 영세균등화였다. 이렇게 전개되던 조선 후기의 소농사회가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이식된 근대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누적된 힘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개방경제를 만나면서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바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향이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주사파 운동권 권력은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왜곡을 감행해 왔다. 한편으로는 대의제와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분립과 같은 헌법체제를 파괴하면서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자유 시장경제의 기반을 허물어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은 물론 자영업의 줄도산 그리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대기업마저 옥죄어 총체적인 경제파탄을 불러오고 있다.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이들은 환상적 평화주의로 스스로를 무장해제 하면서 국방의 근간을 허물고, 오도된 좌파 민족지상주의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했던 ‘한미일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북한의 ‘갇꾼 전술’을 따라 한미일동맹 해체에 모든 것을 다 걸며 북한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추종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미일동맹은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고 북중러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생존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예측의 상징일 뿐이다.

문재인 운동권 권력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이 역사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마침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길로 가고 있다. 권력을 배경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관제 민족주의’를 앞세워 폐쇄적 좌파 민족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반일 종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마지막 단계인 연방제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이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들은 ‘반일감정’을 활용하고 있다.

2. ‘개방형 민족주의’라는 자본주의 정신

1)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가설 비판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각각의 문화에는 서구의 개신교 윤리에 대응하는 기능적 등가물이 있을 수 있다고 인

정했다. 또한 그 어떤 전통 종교도 ‘끊임없는 이윤추구’ 나아가서 그에 기초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요구하는 윤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근면을 통해 생활을 향상시키고 현실에서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전통 윤리나 가르침은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다.

전통적 종교와 윤리가 경제적 풍요와 부에 대해 보여 주는 이와 같이 애매한 입장 때문에, 종교가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과 윤리로 작용했다는 설명은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중요한 질문은 왜 자본주의 정신 즉 끝없는 이윤추구가 한 편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합리적 이기심으로,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 사회적 수준에서는 그러한 본성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공동선과 최고의 집합적 이익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다.

기독교이건 유교이건 혹은 그 어떤 종교이건 인간의 지나친 돈벌이 욕구는 규율해야 하는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절제되어야 했다. 따라서 돈벌이에 대한 욕구 즉 개인 차원의 이윤추구를 긍정하는 사회적 가치의 출현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준에서 집합적으로도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했다.

자본주의 정신의 등장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연히’ 제공하는 전통적 윤리의 존재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 보다는 훨씬 더 분명한 집단적 목표와 새로운 성취동기 그리고 윤리체계를 필요로 한다. 베버 테제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약한 고리’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보완이 최근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아래 연구가 대표적이다.

Greenfeld, Liah. 2001. *The Spirit of Capitalism: Nationalism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이 책은 세계사의 경험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근검절약이라는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동기가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동기 즉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주장한다. 즉 세계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개방형 체제에서의 ‘경제적 민족주의’야말로 자본주의 정신이 등장하는 결정적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2) 새로운 윤리·가치 체계로서의 ‘경제적 민족주의’

일찍이 백여 년 전 베버는 개신교 종파인 칼빈주의의 예정설 때문에 구원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견디다 못한 신자들이 현세에서의 생활을 근면성실하게 영위함으로써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본의 아니게’ 성립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베버의 이 주장은 같은 칼빈주의 국가면서 동시에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었던 네덜란드 공화국을 제치고 상대적으로 후진이었던 영국이 왜 산업화에 먼저 성공하였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없었다.

새로운 연구들은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와 매우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왜냐면 산업혁명의 역사가 민족주의 역사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발전의 역사는 선진 국가로부터 후진 국가로 발전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간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역동적인 추격과 방어의 과정을 동반하여 왔다.

예컨대 영국은 뒤쳐진 가운데 출발하여 앞서 있던 네덜란드 경제를 따라잡고 결국에는 추월했다.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의 영국 추격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최근에는 중국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듯이 똑같이 칼빈주의를 신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선진이었던 네덜란드 공화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후진이었던 영국이 돌파구를 만들어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속적인 지배력을 획득했다.

이러한 사실은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가설에 대해 변칙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린펠트 (Greenfeld, 2001) 는 이러한 변칙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주의는 최초로 영국에서 출현해서 사회의 지배적인 비전이 되었고 1600년까지 영국의 사회의식을 효과적으로 전환시켰다.

비슷한 전환이 다른 나라에서 감지되기까지는 백 여 년의 시간이 더 지나야 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체성과 의식의 변환은 오히려 훨씬 더 지체되었다. 심지어 19세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네덜란드에서는 그러한 의식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새로운 정신 혹은 원동력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조건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를 더해 주었다. 그 요소는 다름 아닌 빈약한 조

건과 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하고 확대하여, 다른 나라들이 더 잘 갖추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발전 조건을 영국이 추월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이었다. 이 정신적 동력이야말로 영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쟁 우위를 추구하여 산업화를 최초로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힘이었다.

프로테스탄티즘 가설이 분석하는 자본주의 정신의 ‘우연한’ 성립과는 달리, 민족주의 테제는 근대경제가 요구하는 사회구조의 유형을 ‘필연적’으로 촉진시킨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경쟁하는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평등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의 위계를 흔들며 특히 전통적으로 무시당하던 직업 특히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직업의 지위를 상승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력을 키워서 대외적인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경쟁적으로 평가되는 조국의 위상 즉 국가적 위신을 높여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관심 때문에 반드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동반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동력이야말로 한 나라가 그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는 최고의 자극이다.

따라서 ‘경제적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후발국은 선발국을 따라잡는 자본주의적 국제경쟁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극이야말로 근대 경제의 경향적 특징인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궁극적 동력이다. 세계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온갖 인간의 욕망을 경제성장에 집중하게 하는 하나의 새로운 세트로 구성된 윤리와 가치 체계다.

특히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자본주의 정신은 특정한 나라의 경제가 국제적 경쟁의 장 속에 포함되는 맥락에서만 등장한다. 따라서 민족·국민·국가 의식(national consciousness)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정신의 성립은 나라마다 그 환경과 조건이 달리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결정적 계기는 비스마르크 체제를 뒷받침한 민족주의 경제사상가 리스트(Friedrich List)의 활동이었다. 일본은 전통적인 ‘경제제민’ 이념에 입각해 ‘경제 전쟁’이라는 관점과 전략에서 선진국 따라잡기를 시작한 명치유신 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두 나라 모두 2차 대전 패전 후 이러한 자극은 더욱 강화되어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잘못을 뒤로하고 최근에는 더욱 경제적 민족주

의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 민족주의는 박정희가 “우리 민족의 무기력한 역사에 대하여 행한 총절의 반역” 즉 5.16 혁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영훈, 2013). 그때부터 선공후사의 가치와 규율에 입각하여 개인과 국가의 상호 배태에 의해 조율된 행동의 힘이 본격적으로 경제에서 작동하면서 이른바 수출 주도 산업화에 매진하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민족주의의 양태는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부터 출발하여, ‘일본인도 하는데 한국인이 왜 못하냐’라는 일본 따라잡기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나아가서 경제적 민족주의 의식은 기업인으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육성을 요구하였다.

단순한 사욕 즉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윤추구 동기가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집합적 가치와 목표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자본주의 정신으로 발현되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해 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중흥” 혹은 “조국 근대화”와 같은 민족주의적 이념과 목표가 등장하고 나서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민족주의라는 가치 속에서 한국의 기업은 국가의 대표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며 기업보국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제에 뛰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윤추구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정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에서의 생존이라는 민족주의 가치에 온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자극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 나아가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특정한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해 주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역사에서 부활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합리적 계산은 필요조건이고 문화적 전통에 바탕을 둔 호혜성, 도덕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현대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후쿠야마, 1996: 30).

3. 식민지배와 민족주의

오늘의 한반도는 과거 두 세기를 규정하였던 역사의 힘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매우 특수한 공간이다. 남과 북의 분단과 대립이 냉전의 관성을 확인해 주는 ‘차가운’ 현실이라면, 일본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식민지의 유산이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 꿈틀대고 있음을 자각시켜 주는 ‘뜨거운’ 현실이다.

19세기 아니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배는 전지구적인 현상이었다. 마치 요즈음의 경제가 전지구화 되고 있듯이 당시의 식민지 경영은 전지구화 되어 있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은 거의 모두가 유럽의 식민지였다. 따라서 오늘의 기준에서 본다면 식민지배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특수한 사례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입장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경험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식민지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식민지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당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면 식민지 경험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떤 식민지는 16세기부터 시작되었고, 또 다른 식민지는 20세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 어떤 식민지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또 다른 식민지는 전혀 모르는 생소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의 400년 식민지 경험과 우리 나라의 35년 식민지 경험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수 천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매우 잘 아는 이웃나라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사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전혀 교류가 없던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한 사실을 동일한 맥락에서 평가할 수는 더욱 없다. 나아가서 산업화의 선발국인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지배한 경우와, 산업화의 후발국인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경우를 같은 시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이처럼 다양한 식민지 경험은 물론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시작된 탈식민지의 전개와 또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지 사회가 남겨 놓은 유산은 탈식민지 시대가 출발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식민지 이전의 전통문화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두 가지 세력의 문화적 변용이 진행되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토착문화의 끊임없는 저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건 탈식민지는 바로 이러한 식민지 시대의 상황이 남겨 놓은 유산으로부터 조건 지워져 출발하였다. 따라서 탈식민지 시대를 특징짓는 ‘민족주의’의 전개 또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의 식민지 경험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아래 [식민지배의 다양성] 표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이 표를 통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험이 식민지 가운데에서도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배를 받은 기간은 가장 짧지만, 역사문화적인 근접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식민모국은 제국주의 세력 가운데 산업화의 가장 후발국이었으며, 식민지배의 갈등을 완충해 줄 다른 제3의 민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은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식민모국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식민지배의 다양성]

식민지	식민지배의 기간	역사문화적 상호이해	식민모국의 산업화 상황	식민지배 개입 제3의 민족
일본의 한국지배	1910-1945 (35)	매우 높음	후발국	없음
일본의 대만지배	1896-1945 (49)	비교적 높음	후발국	본토 중국인
프랑스의 베트남지배	1857-1956 (99)	비교적 낮음	선발국	현지 중국인
영국의 말레이시아지배	1824-1957 (134)	매우 낮음	선발국	현지 중국인
화란의 인도네시아지배	1602-1945 (343)	매우 낮음	선발국	현지 중국인
스페인(미국)의 필리핀 지배	1565-1945 (380)	매우 낮음	선발국	거의 없음

이러한 식민지배의 차별성은 식민지 이후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민족주의’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모든 식민지에서 민족주의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저항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도는 앞서 살펴 본 식민지 상황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여 준다.

한국은 패전국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가혹한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식민통치 전 기간에 걸쳐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문화적으로 단일한 단위로 묶였다. 일본은 꿈에라도 한반도가 독립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에 엄청난 물량의 산업시설을 투자하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의 기준에서 한반도에 들어선 흥남의 질소비료공장, 수풍의 수력발전소, 진남포의 공업단지 등은 모두 첨단 중화학 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기도 했다. 또한, 일본이 식민지의 농업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관개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 역시 다른 식민지의 경우에는 절대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적극적인 식민지 경영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패전하였고 한국은 갑자기 독립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탈식민지 한국의 독특한 출발 조건을 제공하였다. 하나는 식민지 한국에서는 다른 유럽의 식민지와는 달리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산업부문에 유입되어 노동자로서 혹은 기업가로서 이른바 근대적 규율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식민지 사회를 통해서 근대성의 확립이 진척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통합하여 지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컸던 만큼 탈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족주의가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일본은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동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패전은 그러한 노력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로 하여금 식민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조건은 일본의 식민통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억압적이었다는 이른바 ‘식민지수탈론’의 입장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식민지에 대한 ‘수탈’과 ‘근대화’가 동시에 그리고 가장 강도 높게 진행된 특수한 사례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반일 종족주의’는 개방형 민족주의인가?

이영훈 등은 최근 출판한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식민지 시대와 관련해 다음의 네 가지 거짓말을 고발하고 있다.

- 1) 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전국 토지의 40%를 국유지로 빼앗았다는 교과서의 서술은 엉터리 소설이다.
- 2) 식민지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는 교과서의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 3) 일제가 전시기에 조선인을 노무자로 동원하여 노예로 부렸다는 주장은 악

의에 찬 날조다.

4) 일본군이 위안부를 확보하기 위해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 길거리의 처녀를 납치하거나 빨래터의 아낙네를 연행하여 위안소로 끌어갔다는 통념은 단 한 건의 사례도 확인되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실 이영훈과 그가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이런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학술지 및 학술서적을 통해 전파해 왔다. 처음 이런 논문이 나오자 국사학계는 제법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었다. 그러나 논리와 실증에서 밀리자 국사학계는 무시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바꾸었다. 그리고는 엄격한 학문의 잣대가 아닌 여론의 힘으로 이런 주장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국사학계의 90 %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 민족사관을 따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편향이 만들어낸 야만이다.

이들이 던지는 가장 대표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대화되었으니 식민통치에 감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이영훈의 대답은 명쾌하다. 제국주의는 수탈 여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다. 수탈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자유를 빼앗기 때문이다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p. 80).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영훈은 식민지 수탈의 메카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런데 그런 식의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선의 토지와 자원과 공업시설은 점점 일본인의 소유가 되지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식민지적 수탈이지요.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여 한반도의 자원과 공업시설을 일본인의 소유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동화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탈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이라 하면 사람들은 일제의 조선 지배를 미화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탈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보자는 것이 식민지근대화론이지요. 문자 그대로 식민지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였습니다”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p. 94)

이영훈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런데 식민지근대화론은 이러한 제국주의 비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의 지배가 법과 제도와 시장을 통한 것인 만큼 그것은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원리의 새로운 문명이 이식되어 전통과 충돌하고 접합하면서 나름의 형태로 정착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점을 동시에 보자는 것이 식민지근대화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과정에서 조선인 자신이 스스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을 근대인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pp. 94-95).

국사학계의 지배적인 담론인 좌파 민족사관이 수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이영훈은 내재적 발전의 실체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앗이 짓밟히고 왜곡되어 발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내부에서 근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주체적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온 해방과 건국,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가 채택한 자유시장과 개방경제의 원칙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세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자본주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바로 그 결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성공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한국인 스스로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반일 종족주의’는 개방형 민족주의인가? 이영훈의 대답은 단호히 ‘아니다’이다. 오히려 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7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공을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 반일 종족주의는 ‘식민사관’을 부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만들어진 국사학의 거짓 신화다. ‘식민사관’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 즉 개방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내부의 동력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주장은 개방경제에서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자본주의 정신을 선택한 전략과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해야만 이승만, 박정희의 개방형 민족주의와 문재인 권력의 폐쇄적 좌파 민족주의 즉 반일 종족주의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영훈은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서양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와 구분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란 범주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이며, 하나의 권위이며, 하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족’이라 함이 옳습니다. 이웃 일본을 세세의 원수로 감각하는 적대감정입니다.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이 같은 집단 심성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 때문입니다. 이를 안고선 이 나라의 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선진화는커녕 후진화할 것입니다. 거짓말의 문화·정치·학문·재판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서문).

반일 여론과 한일 경제 대결의 실상과 대안 : 세계 무역질서 개편과 한국경제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1. 들어가며 : 글로벌 공급 사슬과 삼성 반도체 공장의 사례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시안공장에는 축구장 수준만큼이나 넓은 공장 안에 수백 대의 기계들이 꽉 차있다. 직렬 병렬로 준비하게 배열되어 있는 기계들 사이마다 한쪽 끝이 천장에 붙어 있는 수백 개의 로봇 팔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한 공정을 끝낸 반제품들을 다음 공정을 담당하는 기계로 운반하여 투입하고 있다. 수백 개의 로봇 팔이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다. 이렇게 각각의 기계별로 담당한 공정을 다 거치면 최종제품이 탄생한다. 물론 사람의 역할을 제한적이다. 엔지니어들은 기계별 작동 수준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공정별 기계들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천장과 바닥의 안쪽에 로봇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각종 기계와 부품들이 잘 숨겨져 있고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되면 공장 하나가 거의 종합예술수준이다.

유럽회사가 제작한 초고성능 광학렌즈도 필요한데 이는 아주 작은 반도체에 미세한 흠결이라도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백배 수준으로 확대가 가능한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공학은 물론 기계 화학 건설 관련 공학에다가 광학까지 동원되어 수많은 분야가 총망라된 기술의 결정판인 셈이다.

견학을 할 당시 담당자에게 기계는 어느 나라제품인가요라고 질문을 했다. “한국 일본 독일산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기타가 1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뻔한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기계를 우리가 다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를 하여 기계를 각자 제작하고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드는 기업에서 기계를 사다가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세계최고수준의 반도체를 제작합니다.”라는 대답이었다.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야지 모든 기계 다 만들겠다고 여러 곳으로 역량을 분산하면 각 분야의 최고에게 따라 잡힌다는 설명을 들으며 글로벌 공급사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2. 글로벌 공급 사슬

수많은 제품별로 원료는 A국, 부품은 B국, 반제품은 C국, 최종제품은 D국 하는 식으로 연결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급사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공정 하나하나에 필요한 수많은 기계들이 각각 만든 나라가 다르고 만든 기업도 다르다. 이러한 기계들이 잘 연결되고 공정별로 결합되어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별 국가별로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이 비교우위를 극대화시킨 공급사슬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 부품을 모두 국산화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3. 자본주의 3.0과 자유무역

1980년 대에 시작된 자본주의 3.0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은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되었다. 많은 라운드를 거치면서 다자간협상체제가 국제기구로 상설화된 WTO 체제가 구축되는 등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 것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같은 신흥국이 다른 나라에게 무역장벽을 낮추라고 요구를 한다면 빈 메아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힘있는 선진국들이 나서서 국제기구와 규범을 만들고 다같이 무역장벽을 낮추자고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거절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여 수출중심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가동시켜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4. 미국의 일본 때리기 : 플라자 합의

1980년 대에 대미흑자를 줄이기 위해 엔달러 환율을 급격하게 조정한 플라자합의도 우리에게서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 1985년 당시 미국 무역적자의 40% 가량이 대일적자에서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은 플라자 합의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250엔 수준에서 120엔대까지 낮춘 것이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면 2만5000엔을 벌던 일본 기업이 12000엔 정도밖에 벌지 못하게 되자 할수 없이 달러표시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게 되었다. 일본제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일본 제품의 가성비 현저히 하락하게 되었고 거꾸로 가격이 워낙 낮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성비가 부각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무역체제와 함께 플라자 합의는 금상첨화의 역할을 한 것이다.

5. 자본주의 3.0과 자본자유화

하지만 자유무역체제와 함께 추진된 자본이동자유화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이탈하는 현상, 소위 ‘서든스톱’ 현상이 발생하면서 1997년 우리는 외화유동성 고갈로 인해 외환위기를 당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97년 10월에 일본은행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대출한 자

금을 80억 달러 회수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나와있다. 외화유동성이 고갈되자 우리는 IMF에서 210억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제목이 상징하듯 날벼락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달러당 800원 정도였던 환율이 2000원을 거쳐 1500원대로 조정되자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현저히 회복되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700억 달러의 경상수지 누적흑자를 달성하였고 2001년 중반에 IMF에서 빌려온 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위기를 당한 것도 극적이었지만 위기극복 과정도 극적이었다. 당시에 경제위기를 당한 국가가 많지 않았고 선진국 상황은 좋은 상태이다 보니 우리 기업들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소화되었고 이렇게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우리는 IMF에서 지원받은 부채를 불과 4년여만에 다 갚을 수 있었다.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도움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6. 트럼프노믹스와 중국 때리기

그런데 최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글로벌 위기의 종식 국면에서 등장한 트럼프노믹스가 세계경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배경에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중국 압박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최근 미국을 가장 자극한 중국의 정책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이었다.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이 플랜은 가장 중요한 10대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2040년 초반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현재 기술등급을 한국과 같은 수준의 3등급으로 규정하고 독일은 2등급, 미국은 1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플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는 한국을, 2035년까지는 독일을 제치고 여세를 몰아 204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이러한 노골적인 중국의 전략을 보며 미국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 ‘차이메리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차이나(중국)와 아메리카(미국)는 이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넌 모습이다.

중국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였다. 미국적자의 60%가 대중적자일 정도로 미국 시장을 활용한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확보한 달러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이고 경제력과 국방력을 증대시키면서 글로벌 위기를 무사히 피해갔다.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의 위상추락과 함께 중국은 G2 수준으로 국격을 격상시켰다. 자신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을 통해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셈인데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의도를 노골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변화는 역풍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 역풍으로 인한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우선 대미흑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미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 모두가 미국시장을 이용만 할뿐 미국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불량국가들이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미흑자규모가 큰 일본 독일 한국까지 불뚝이 튀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어느 때 보다 밀착된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면제부를 받았다. 독일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인 사실상 자기 시장이다, 지역경제를 장악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이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 인상과 함께 대미흑자축소의 압력까지 받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대미 흑자는 한때 250억 달러를 넘었었다. 전체 수출 중에서 대미수출 비중은 10% 수준이었는데 전체 무역흑자중에서 대미흑자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우리에게서 너무 좋은 FTA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흑자를 200억 이하로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환율조작국지정 요건 3가지 중 하나가 대미흑자 200억 불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있다 보니 이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대미흑자를 줄이고 있다. 중동보다 운반시간이 두 배쯤 걸리는 미국에서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등 힘들게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7. 중국 압박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카드

미국은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동원하였다. 미중 무역에 있어서 관세인상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가성비를 떨어뜨려서 미국 시장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압박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고교 졸업생중 우수인력들이 미국의 일류대 공대에 진학하던 관행을 깨고 중국학생들의 미국 대학 유학까지 억제하고 있다. 올해 중국 고교 졸업생 중 미국 MIT 대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한명도 없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기술인력들을 미국 기술을 빼가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거점들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는 탈중국 엑소더스를 유도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국가들이다.

8. 중국압박과 WTO 체제 무력화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상체제의 핵심인 WTO 체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이 체제 하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WTO 무역분쟁조정 체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2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에서 미국의 패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상소기구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지금 3명만 남아있다. 임기만료된

위원에 대한 후임 임명을 미국이 반대한 결과이다. 올해 12월 10일에 3명중 2명의 임기가 끝나면 1명만 남는다. 상소기구에서는 위원 3명이 안건 1건을 심리하게 되어 있으니 올해 12월 10일 이후 위원 1명만 남으면 상소기구 기능 자체가 정지된다. 또한 미국은 개도국 지위도 문제 삼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개도국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강제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지만 WTO 농업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반대하면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은 무역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개도국지위 인정을 철회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과거 스스로 구축한 다자간 협상체제를 무력화 시키면서까지 중국견제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견제 전략들의 불통은 모조리 우리에게까지 튀고 있다.

9.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일본의 미국 따라하기

게다가 이번에는 일본까지 나섰다. 미국의 중국압박 전략을 보며 일본은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칼을 빼들었다. 3가지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나라를 배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반도체부문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품목들이다. 일본은 무역제한 정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관련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목표인 듯 보인다. 일본이 과거 가장 아쉬워 했던 것 중 하나가 소니와 도시바가 삼성에 추월당해 버린 부분이다. 일본은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실제적 타격을 주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중국압박 정책을 거론하면 된다. 항간에서는 미국의 암묵적 사전적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0. 변화하는 무역 질서와 자본주의 4.0

가히 자본주의 4.0 시대라 할 만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에서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양보를 하던 시대가 가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다같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면 글로벌 공급사슬체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구축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로 치환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와 같이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혜택을 누리던 국가들은 상당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 금융분야 대응능력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대한민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 대한민국 자산규모(2,894억 달러) 중 약 15.6%를 차지한다. 한국내 일본계은행은 298억 달러, 일본소재 일본은행은 155억 달러, 제 3국 소재 일본계 은행은 110억 달러를 제공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투자대조표상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1조 1168억 달러와 1조 1075 달러인데 반해 대일본 자산과 부채는 각각 현재 389억과 833억 달러로서 전체 대비 규모가 각각 3.5%와 7.5% 수준이라 대일본 익스포저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4031억 달러이고 많은 국가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응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본계 자금의 이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이탈 자체가 제 3자에게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떼거리 행동에 의한 추가적 자금이탈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조심스런 행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현황

	상대국	규모	체결·연장일	만기
양자간	중국	64조 원/3,600억 위안 (약 560억 미달러)	2017년 10월	2020년 10월
	말레이시아	5조 원/150억 링깃 (약 47억 미달러)	2017년 1월	2020년 1월
	호주	9조 원/100억 호주달러 (약 77억 미달러)	2017년 2월	2020년 2월
	인도네시아	10조 7,000억 원/115조 루피아 (약 100억 미달러)	2017년 3월	2020년 3월
	캐나다*	-	2017년 11월	-
	스위스	11조 2,000억 원/100억 스위스프랑 (약 106억 미달러)	2018년 2월	2021년 2월
	UAE	6조 1,000억 원/200억 디르함 (약 54억 미달러)	2019년 4월	2022년 4월
다자간 (CMIM)	ASEAN+3 (홍콩 포함)	38억 4,000만 달러** (달러/자국통화)	2014년 7월	-

주: 1. () 안은 체결 시 환율을 적용.
2. *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음.
3. ** CMIM 총 자원(2,400억 달러)의 1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4. 13).

12. 전략적 접근 : 결론

최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외교에 있어서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나 실리나 효율이라는 가치가 실종된 듯 보인다. 오로지 명분과 감성적 접근만이 눈에 띈다. 죽창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 5G 시대이다. 시대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실리와 효율을 기반으로 강경과 온건을 번갈아 가며 시행할 수 있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감성적 접근은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나 두고두고 돌이키지 힘든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기본으로 돌아가기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적 실험들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많다. 탈원전, 소주성 등의 정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정착시키면서 우리의 경쟁력과 기업입지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많다.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우리 경제의 위상은 아직 그리 높지만은 않다는 점을 자각하면서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를 잘 견디어 내기 위한 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때이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성공하는 경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매우 힘들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이 더디어지면 일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 미국의 중국압박이 성공하는 경우 반도체 산업에서의 중국의 추격속도가 줄어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경우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진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는 정책이 한일 갈등으로 인해 중국을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고 중재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일 갈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반일을 외치고 죽창가 운운하는 것은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 금융에서나 실물에서나 일본과의 대결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금물이다. 실물분야에서의 타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경우 금융쪽에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먼저 타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일부 움직임이 관찰된 바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견디어 볼 수 있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해외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라도래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일 민족주의와 한국의 안보 위기

이 영 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한일갈등의 격화가 한국의 외교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보상황의 몇 가지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북한의 핵 위협 증가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제껏 대북 정책의 대전제는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북핵 문제가 등장한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전제였다. 물론 방법에는 각 정부마다 차이가 있었다. 어떤 정부는 압박을, 어떤 정부는 수용을 강조했다. 어떤 정부는 국제적 협력에 치중했고 또 어떤 정부는 양자간 대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전제는 어떻게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전제는 더 이상 적실성이 없는 공허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이제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진 사실상의 핵 국가가 되었다. 운반체도 개발했다. 소형화, 경량화에도 성공했다 (2019년 일본방위백서). 이렇게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이 과연 그것을 포기할까? 북한에서 나온 자료나 보도를 보면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두 가지 예만 들겠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직후 펴낸 김정은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 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은 금년 5월 4일 신형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 이외에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북한의 핵무기는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북한 핵 위협의 경시이다. 그 근거는 북한이 설마 동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매우 근거 없이 안이한 종족적 믿음이다. 그래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증거나 진전이 없이도 북한이 내뱉는 평화의 말을 곧이 곧 대로 믿는 순진함의 극치를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6.25 남침을 상기하면 이것이 얼마나 안이한 거짓믿음(mauvais foi)인지 알 수 있다. 신종 무기 3종 가운데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은 현재로서는 사거리가 일본까지도 가지 않는 것들이다.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면 어디를 겨냥한 것이란 말인가. 이 무기들은 남한이 가진 요격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내놓고 핵무기를 사용할 공산은 크지 않다. 핵무기는 원래부터 협박용이다. 위협을 통해 목적인 바를 달성하는 도구이다. 적당히 무력시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각종 양보를 끌어내는 데 유효하다. 적당히 국지적 갈등을 일으키고 그때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 핵무기가 없는 쪽은 그 요구에 불응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부의 대가는 파멸이기 때문이다. 비대칭전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남한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조차 끌려 다니게 된다. 이른바 핵 인질 내지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2. 중국의 2중 플레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도울까?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압박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중국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했다. 몇 해 전부터는 중국도 핵 무장한 북한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나 분석이 줄을 이었다. 일정 부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핵 무장 여부만 가지고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중국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대국적으로 그리고 다면적으로 접근한다.

한국전쟁 시기 이래로 중국은 북한을 중국이라는 집의 현관(家門口)으로 생각해 왔다. 중국이 한국전쟁을 참전할 때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순망치한’(唇亡齒寒) 한 마디로 의견을 통일시키는 데 성공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고사를 들어 집의 현관이 불타면 집이 편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사고는 변치 않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어 미국의 주구인 남한이 북한을 석권할 경우 중국이 결코 안녕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로 통일된 한국과 핵 무장을 해서 귀찮은 북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상황이 되면 선택은 당연히 ‘그래도 북한’이다. 중국은 북한에 국제제재가 가해질 때도 음으로 양으로 북한을 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이러한 선택의 개연성은 더욱 커졌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핵

을 가진 북한도 용인할 것이다.

3.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 폐기와 동아시아 신냉전

최근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조약을 폐기했고 그 후폭풍이 동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1987년 12월에 체결한 이 조약으로 두 나라는 중거리핵무기 2700여개를 모두 폐기했다. 그런데 2014년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크루즈형 중거리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여 이 조약을 어겼다. 중국은 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여 중거리핵미사일 2650여기를 실전 배치했다. 이 미사일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넘어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조약을 파기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INF 조약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중국은 이 제안을 즉시 거부하고 나왔다. 중국이 새로운 INF 조약에 반대하자 미국은 중국을 억지하는 동시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핵미사일 배치를 결정했다. 아시아 지역적 특성상 배치될 지역은 괌, 일본, 호주, 한국, 대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의 확립을 노리는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김정은-푸틴 회담, 시진핑-푸틴 회담, 김정은-시진핑 회담이 연이어 열린 것도 INF 조약 폐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인다. 미국의 서진(西進)에 맞서는 삼국동맹이 만들어 진 것이다.

4.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나토식 핵 공유

미국 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유사시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꼽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증명되지 않았고, SLBM은 개발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반면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의 개발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KN-23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탄두 무게는 480kg, 직경은 92cm이다. 북한이 그동안 공개한 핵무기의 직경은 60~70cm이기 때문에 충분히 탑재가 가능하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5~10분 내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300mm 방사포를 혼용 운용하면 대응은 더욱 어려워진다. 북한은 이

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사거리를 200~600km까지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사거리 600km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조만간 이스칸데르급의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올 연말까지는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안보가 이처럼 풍전등화 상황인데도 군 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작은 무기’라며 의미를 축소·왜곡하고 있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ICBM으로 위협만 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선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하기가 어려운 만큼 독일처럼 나토식 핵 공유를 하는 게 하나의 대책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이 지난 7월 25일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과 핵 공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과의 핵 공유 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토록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대학의 보고서가 한·일과의 핵 공유 협정을 제안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는 방증인 동시에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실패를 상정한 ‘플랜 B’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상당량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 때문에 ‘핵을 핵으로’ 억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선 핵 공유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 상쇄 및 역내 영향력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핵 공유는 훈련비용 등을 문제 삼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전략자산의 전개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고, 핵 공유에 따른 핵탄두의 운영·관리 비용을 한국과 일본에 분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파탄상태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로 볼 때 한·미·일 핵 공유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의 고조가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 반일 민족주의의 고조

북한의 신무기, INF 조약 폐기 이후 가열하는 동북아의 세력경쟁과 군비경쟁, 중국-러시아-북한 3국연대의 위협 등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동맹에 의존한 핵 억지력의 확보가 시급한 것이 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 새로운 위협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일본 아베정부는 미국의 핵미사일 배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핵미사일 통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관계의 악화와 한미관계의 긴장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세 나라에서 새 지도자들이 등장한 것도 한몫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를 외치며 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경찰이 되거나 물주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한·일, 미·일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관계도 철저한 계약관계로 보면서 연일 미국의 안보우산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미국을 강타한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은 동북아도 휩쓸고 있다.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시진핑(習近平)의 중국,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일본, 문재인의 한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일 갈등만 해도 아베의 우파 국수주의와 문재인의 좌파 국수주의가 정면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국내에서 반일 민족주의 물결은 지난 7월 1일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본 정부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외조치가 결코 ‘대항조치’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풀이했다. 모호한 핑계를 내세운 부당하고 불법적인 수출규제의 문제인 것처럼 접근했다.

그런데 일본의 조치를 촉발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많은 불화수소를 수입한 것을 발견한 일본이 그 불화수소의 용처를 물어왔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작에도 사용되지만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대답을 끌던 한국이 이 불화수소가 반품되었다고 하자 일본은 1t도 안되는 불화수소만 반품된 것으로 나오니 나머지 39t의 행방을 물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일본은 3개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건별 수출심사를 받게 했다. 이어서 8월 2일에는 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정말 일본이 모호한 이유를 내세웠다고 믿으면 제대로 된 답을 해 먼저 구실을 없애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 아니겠는가. 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가.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우대조치를 철회한 것일 뿐 수출금지도 아니지 않은가. 아시아의 다른 모든 나라가 보통의 절차를 거쳐 거래하고 있지 않은가. 결과론이지만 이후 일본이 해당 물품을 한국기업에 계속 수출하고 있지 않

은가.

만약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견제를 할 의도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전 우리 기업들이 채 자라기 전에 싹을 자르지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자신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했을까. 일본 사람들의 겉모습(다테마에)와 속내(혼네)가 다르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한국을 핍박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의병이 등장하고, 죽창가가 등장하고, 동학군이 등장했다. 이런 감성적 대응에 국민들도 호응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여행객들은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목적지를 바꾸었고 손님이 급감한 항공사들은 취항편수를 줄였다.

그러던 중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반일감정의 확산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소속의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반일감정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결정했다. 사실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양국의 안보에 공히 기여하지만,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이다. 한국은 인적정보(HUMINT)에서 앞서지만 전자정보(ELINT)에서 뒤진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며,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과제인 한국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서 얻는 정보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미국이 과연 일본과 관계가 떨어진 한국과 과거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할지는 의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안보협력의 상징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라는 점이다. 만약 한일관계가 더욱 소원해져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주춧돌’(cornerstone)인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다. 과거 애치슨 라인 때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연장할 것처럼 알려졌는데 왜 갑자기 뒤집었을까? 세간에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거나 반일 민족감정을 부추겨 지지율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가의 안보를 저버린 행위일 것이다. ‘설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경우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2차대전을 두고 한마디로 “필연적이지 않았던 전

쟁”(unnecessary war)이라고 평했다. 피할 수도 있었던 전쟁이라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유권자들의 반전정서,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맹목적 평화주의 그리고 안이함과 희망적 사고 때문이었다고 처칠은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다준 회고록 [제2차세계대전]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 ‘영국판 징비록’에서 처칠은 ‘공포와 피비린내 나는 포격에 기초한 독재체제(나치즘)의 등장’에도 지도자들은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국익을 무시한 채 대중적 인기만 갈망했다”고 개탄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국가 존망의 문제마저 외면하는 정치꾼들은 독일의 야망과 전쟁 준비를 인지하고도 침묵하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5. 맺는 말

지소미아의 폐기는 한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까지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여러 경로와 사람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요청해 왔다. 지소미아 폐기로 미국도 한국을 과거와 같이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인다. 더 이상 안보협력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 문제를 꺼냈을 때부터 이런 결말이 날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것 같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16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대응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7월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연대’만 강조했다. 지금의 안보상황은 실로 엄혹하지만 ‘핵 공유’와 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너진 신뢰 때문에 언감생심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 천우신조가 있기를.

[illegible]

